



제1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 -



제1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4년 3월 12일 (금)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바람직한 산학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15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한국고등교육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정책포럼은 지식기반 사회를 맞아 지식근로자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인식과 정부, 산업계, 학계가 연구뿐만 아니라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적 특성이 있는 산학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한층 더 활성화되

고 내실있는 산학협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산학협력의 전망과 방향'을 주제로 한 이 용태 전경련 부회장(삼보컴퓨터 명예회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21세기 새로운 산학협력 모형'(이계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 강화 방안'(손승요 아주대 부총장)을 주제로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대학교육』에서는 이번 정책 포럼의 주제발표문을 발췌하여 게재한다.

정부의 산학협력 정책과 과제 : 21세기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

I. 참여정부 산학협력 정책의 의의

1. 그간의 산학협력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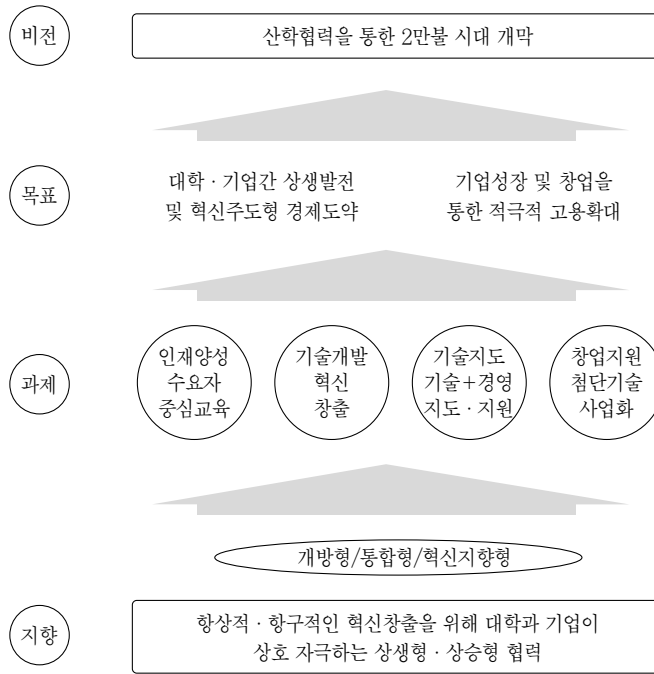
- 1960년대~1980년대: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산·연 협력
 - 취약한 대학연구능력에 의존하기보다는 특별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산업기술 개발을 리드하는 전략 추진
 - 1960~1970년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설립·육성
 - 1980년대: 출연연구소를 책임기관으로 연구개발사업 시작
- 1990년대 이후: 대학중심의 산·학 협력 주도
 - 다양한 정부-민간 협력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대학이 새로운 협력주체로 부상
 - 대학 자체에 대한 연구비 투입 본격화
 - 정부연구사업이 과기부 중심에서 10여개 부처로 증가함에 따라 출연연구기관이 모든 협력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곤란
 - ⇒ 기업이 기술개발을 선도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특정연구 주체에 집중 투자후 산업계 확산을 유도하는 전략 채택

2. 지난 산학협력 정책에 대한 반성

- 국가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전체 R&D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산학 연계 정도는 아직 미흡
 -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R&D 투자 결과가 산업계로 원활히 유입되지 못하는 실정
 - * R&D 투자규모: 세계 8위, GDP 대비 연구비 비중: 세계 7위
 - * 산학협력: 세계 17위, 기업간 협력: 세계 27위
- 필요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개별 사업을 통해 해결하는 단편적·분산적 지원방식으로 추진되어,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플랜하에 이루어지지 못함
- 기술협력 중심의 단순한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등 지역의 혁신역량 강화에는 미흡
- 산업계 수요와 괴리된 공급자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 대학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연구사업의 필요에 따라 적정 기업을 선택하는 경우 다수
- 교수 중심의 공동 연구과제 개발에 주력
 - 산학협력이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되어 추진되지 못함

3. 참여정부 산학협력 정책 방향

-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지역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산학협력을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



(그림 1) 참여정부 산학협력의 비전과 목표

고 지역 전략산업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인식

- 지역의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이를 지역발전과 지방문화발전의 중심축으로 활용
- 지역기업이 대학의 연구역량 및 성과를 보다 효율적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생산현장과 연구현장이 긴밀히 연계되는 매력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여, 대학 주변의 기업 집적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 촉진
- 대학과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상생 발전 전략을 스스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혁신창출형 산학협력 기반 조성

II.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산학협력 정책과제

1. 산학협력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 육성

- 산업 집적지와 주변 대학의 산학협력 활동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산업단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
- 정책과제 : 지역내 산업 집적지와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갈 산학협력 중심대학을 선정·육성
 - 현재 단순 집적지 상태의 산업단지 등에 대학을 통한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대폭 강화
 - 대학내 공동 연구시설 및 공동 연구장

〈표 1〉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산학협력 관계구축 방향

공급자 중심 (대학 중심)	→	수요자 중심 (기업 중심)
단편적 · 일회성 협력 (기술개발 과제중심)	→	지속적 · 장기성 협력 (인재양성 등 종합적 접근)
개별적 협력(교수, 학생-기업)	→	기관간 협력 (대학 시스템의 산학협력형 전환)

비 공급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 인프라 확충

■ 추진방향

- 특정 사업 또는 개별 프로젝트 방식이 아닌 혁신 클러스터로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종합 처방방식 채택
 -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담당할 산업단지를 정하고, 지역 특성 및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수행
- 산학협력 중심대학은 대학교육 및 산학협력 체제를 산업집적지의 R&D 센터 역할 수행에 맞게 개편
 - 교수 및 학생평가, 교과목 개편, 교수 임용, 행정지원 등 대학 시스템을 산학협력 중심으로 재편

■ 2004년 지원규모 : 400억원

■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기능 : 산업 집적지를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재(public goods) 생산

-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R&D 센터 역할
- ②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 · 경영지도
- ③ 공동장비 지원센터 설치 · 운영
- ④ 대학 · 기업간, 기업 · 기업간 네트워킹

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 제공

⑤ 지역 기업의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공급

■ 주요 특징

- 개별 교수 또는 학생 중심이 아닌 대학 전체가 산학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전체 운용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노력
- 산학협력 중심대학의 연구개발 및 장비 구입은 주변기업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수요자 선택권 강화)
- 구입된 장비는 공용장비 지원센터를 통해 언제나 주변기업들에게 개방토록 의무화
- 대학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닌, 기업의 필요에 따라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주문형 R&D 방식 도입

2. 수요자 중심형 대학교육 강화

가. 현황 및 과제

- 문제점
- 대학은 기업의 수요를 고려한 전문교육 보다는 이론 위주의 공급자 중심형 교육에 안주하여, 산업계의 불만 고조
- 청년실업은 악화되는 반면, 기업은 원하는

인재를 구하기 힘든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심화

■ 정책과제 :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교육 확대

- 기업체 대표 또는 업종별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도입
- 기업 현장을 이해하고 실무를 겸비한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생의 장기간(6개월) 기업연수를 지원하는 산학협동교육 프로그램 확산

* 금년부터 산학협력민관협리기구를 통해 시행 (1학기 시범사업 추진)

■ 기대효과

-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발전을 유도하여, 다양화된 전문교육을 통한 경쟁력 확보 및 지방대 기피현상 해소
- 기업의 요구수준에 맞는 대학교육을 통해 지역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 및 청년실업 해결의 단초 제공

나. 주요 사례

- 한국시계공업협동조합은 시계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동서울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계 관련학과 개설
- 협동조합 등 산업계가 장학금을 제공하고, 업계 전문가 강의 등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양성 성공
- 2003년 배출된 1회 졸업생은 로만손, 로가디스, 타임클럽 등 회원기업에 대부분 채용
- 재학중에는 산학연계를 통해 음성번역 기능, GPS 등 시계관련 첨단 신제품 개발 및 전시회까지 수행

• 경북대는 만도와 '신산학협력 협약'을 통해 주문형 교육 프로그램인 '만도트랙' 시행 (2004.2.16)

- 기업과 대학이 함께 산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실무 중심의 5개 과목 교육
- 학생들은 계절학기 동안 기업에서 합숙하며 현장실습을 받게 되며, 졸업후 전원 취업
- 기업은 학비 전액과 생활비 등 1인당 연간 1천만 원씩 지원
- 기업은 '기계'와 '전자제어'를 동시에 이해하는 맞춤형 우수 인재 확보 가능

3. 산학협력 지향형 대학 운영시스템 개편

■ 교수임용 및 평가시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산학협력 전담교수제'를 도입하고, 일정 이상의 업체를 전담하는 교수에 대해서는 책임강의시수를 감면
- 교수 임용시 산학협력 참여 실적·성과 및 경력 우대
- 산업계 출신의 교수임용 비율 확대
- 산학협력 실적·성과를 교육 및 연구실적과 대등하게 교수 업적 평가·승진·보수 등 인사에 반영
- 대학교수의 기업체 파견 등 대학과 산업체간 인력교류 확대

■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학부의 교육과정 개편

- 특성학과(학부)의 교과목 개편 및 정원·교수 증원
- 현장실습 학점제 및 학기제 도입·확대
- 지역 기업들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학

부 과정 설치·운영 등 산업체와 공동
으로 대학 교육과정 개발
⇒ 산학협력 중심대학에 우선 도입하
고, 전국으로 확대

주제발표 2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대학과 기업의 연계강화 방안

4. 협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통합 DB 구축

- 현재 산학간 기술협력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다수의 DB가 운영되고 있으나,
 - 대학의 인식 부족 및 시스템 미비 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장비 및 연구 성과의 공유가 미흡하여 기업의 실제 활용은 미미
- 대학 및 연구소 등이 가지고 있는 혁신자원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적 차원의 기술정보망 구축
 - 각 DB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보 제공 및 중개기능을 강화함으로써, 한정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
- 추진방향 : DB는 분산 구축하되, 통합 서비스 체계를 지향
 - 각 담당기관이 해당 분야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토록 하여, 콘텐츠의 실효성 및 전문성은 확보하되,
 - 분야별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중복 방지 및 코드 표준화 등을 통해 통합검색이 가능한 종합DB 구축
- 제도 개선방안 강구
 - 국가의 지원으로 취득·생산된 장비 및 성과물의 공유를 의무화하고,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
 - 연구장비 등 정보등록 및 DB 구축에 비협조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중지 등 제재조항 마련 등

I. 서언

우리나라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짧은 기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하고 계속적으로 더욱 국가경쟁력을 높여가기 위해서는 산학협동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된다. 산학협동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선도하여 국제적 경쟁을 뚫고 국가의 부와 발전으로 이끌어가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이 체계적,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산학협동의 인프라와 지원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90년대에는 협동연구 개발촉진법, 기술이전 촉진법 등이 제정되고 우수연구센터(ERC), 기술혁신센터(TIC), 지역협력연구센터(RRC), 테크노파크, 대학산업기술지원단(UNITEF)의 운영 등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확충과 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이 수행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 보다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산학협동을 통하여 국가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산·관·학계의 집중적 관심과 논의는 RIS, NIS란 주제로 널리 논의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정부의 정책에 속속 반영되어 오고 있다. 2003년도에 이루어진 산업 교육진흥 및 산학협동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를 두어 산학협동

의 새로운 인식과 시스템의 도출을 가능하도록 한 법적 장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에 근거를 둔 산학협력단 운영모델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대학이 이니셔티브를 갖고 그 대학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궁극적으로 대학이 연구 개발한 최신, 최고의 결과를 신속히 산업화, 제품화, 판매화로 이끌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면서 부수적으로 연구인력, 산업인력도 양성하고 개발이익이 다시 대학으로 피드백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더욱 지속적, 체계적으로 활성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이 위치한 지역의 기업과 지자체가 대학과 더불어 지역발전의 거점을 대학에 두고 신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산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도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산학연 클러스터의 제안 및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제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창출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 양성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하고 교육과정의 개발과 산학연계 교육의 활성화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한된 자원과 환경 속에서 여건이 좋은 외국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 연계와 지원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고, 도시공학적 연계성과 신속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과 대학은 의존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협동을 통하여 더욱 향상시키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지역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산학연계를 장려하고 적극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대학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지역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시설,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지역산업의 발전은 그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부와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관점은 산학협동의 당위성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정책의 초점이 모여져야 함도 명백하다.

근래 중앙의 일간지가 벌린 대학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결론적으로 인재양성이라 맺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I. 산학협력의 방향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학, 산업계(상공회의소 등 경제인단체조직 포함) 그리고 지자체(중앙정부 포함)가 갖고 있는 역량과 관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당기관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국가발전을 이끌어간다는 궁극적 목표는 명백하다 해도 실제로 각 기관의 특성과 장·단기적 전개효과에 따라 관심의 집중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가 갖고 있는 것은 자원, 문제, 데이터, 상업화를 위한 전문성, 시장에 관한 지식, '현실'세계 중심, 응용에 대한 관심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학이 갖고 있는 것은 아이디어, 교직원, 연구실 및 학생, 분석적 및 과학적인 전문성, 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 지식의 창출에 대한 관심,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지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자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자원, 행정력, 정책의 입안과 집행, 제도화 등의 광범위한 관심사

를 들 수 있다. 이들 능력과 관심사들은 상호 공통적 보완적일 수도 있고 갈등적 측면도 있으므로 산학협동의 관점에서 잘 조정하고 엮어서 큰 힘을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와 대학은 대승적 차원에서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존중하는 바탕으로 협동이 이루어질 때 힘을 발휘하게 된다. 관은 이러한 방향으로 조정 또는 지원하면서 국가적 또는 지역적 경제발전, 사회발전이 도출되도록 해나가야 할 것이다.

Ⅲ.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한 산학협력

대학의 자체적 역량과 지역산업 특성을 감안하여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으나 연구중심 대학형 산학협력단에 예측되는 주요 사업의 내용으로는 산학을 연계한 인재의 양성으로 첨단기술 연구개발능력을 지닌 연구원이나 지역산업기술자를 양성하고 산학협력 연구개발은 융합적 첨단 신기술분야에 중점을 두며,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활동과 더불어 실험실 벤처기업 육성 등 창업보육사업, 산학협력단이 직접 투자한 학교기업의 운영 그리고 과학기술도시의 건설, 산학연 연구개발 클러스터의 추진 등 지역협력사업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한편 지역의 거점대학형 및 기술교육대학형 산학협력단은 지역여건에 부합하는 공동연구개발, 지역산업체경영세미나 및 기술지도 등과 더불어 창업보육사업, 기술이전사업, 공동장비 및 정보유통사업, 교육 및 인력교류사업 등이 제안되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본래 대학이 갖고 있는 신기술

의 연구개발능력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산업화로 연계하면서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산업발전에도 대학이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므로 이의 성공여부는 대학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된다.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국가적 지원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강력히 추진되고 있으므로 산학과 해당지역관의 공동노력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구개발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의 등장은 산학간의 유연한 협동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지난해 각 대학에 새로 구성된 산학협력단은 아직은 출범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그 운영주체인 대학 스스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지식기반사회, 2만 달러 시대를 활짝 꽃피게 할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에는 대학의 구성원이 혼연일체로 참여하여야 할 일이지만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집요한 마인드가 우선되어야 한다. 물론 마찬가지로 산업계의 참여와 정부나 지자체의 지속적인 정책추진이 함께 하여야 함은 당연한 결론이다.

Ⅳ. 인력의 양성이란 관점에서

현재 대학교육의 문제로 널리 지적되는 대학에서의 배출인력과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수요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산학연계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의 주요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으로서 개인역량, 글로벌 능력, 조직역량, 태도 및 가치관의 범주로 전경련이

제시한 조사결과는 대학의 교육과정 편성에서 대부분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어온 것이기는 하나 그 반영도는 대학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클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는 대기업과는 부분적으로 다를 수 있다.

산업의 내용, 규모, 장래성, 지역적 특성, 국제경쟁성 등 산업의 구성이 다양한 만큼 요구되는 인재의 능력수준이나 역량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의 요구를 만족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는 현장밀착형 산학연계교육의 활성화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적 관점에서 현재 대학과 기업 간 산학연계체널이 일부 가동되고는 있으나 그 기능이 효과적으로 충분히 발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여기서는 산학연계교육과 관련한 포괄적 논의보다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 인턴십

이는 과학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경영, 관리, 교원교육 등 인문 사회분야에서도 현장감을 향상하고 실무에 대한 초기접근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방법이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보편화할 필요가 있다.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턴십을 수용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은 인턴십의 내용과 기간을 더욱 다양화하고 특성화함과 더불어 운영의 유연성을 갖도록 하면서도 질적 표준이 달성되도록 정규 학위취득을 위한 기본요건의 일부로서 학점화는



물론 산학협동에 의한 공동책임지도가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참여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도 확실해지고 인턴십에 의한 교육효과도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의욕적으로 앞장서서 시행하고 있는 인턴십 제도가 더욱 광범위하게 활성화되도록 학계, 산업계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 협력함이 바람직하다.

인턴십 제도는 인턴십의 내용 충실화에 의한 질의 향상과 더불어 기술분야 뿐만 아니라 취업 시 실무감각과 체험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로의 양적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인턴십을 외국대학과 연계하거나 해외 산업으로 확대함으로서 국제적 역량을 함께 배양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 산업수요에 일치하는 집중식 교육과 주문식 교육

예를 들면 급변하는 IT산업에 대응하는 인력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된 교과과목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으로, 이론에서부터 설계, 구현까지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교육은 한 학기(18주) 동안 학습하면서 집중적으로 수업과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따라서 각

과목은 3주 혹은 6주에 해당된 시간을 수업 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 수업시간은 주 5일, 하루에 8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 인원은 한 반에 IT교육은 30명, 영어 교육은 20명으로 진행하며 교육장소는 산업체의 기숙사에 입사하여 훈련하는 것으로 한다. 교육대상은 학부 2~3학년생 중 희망자로 하며 산업계의 수요와 주문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선 2개 반의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수는 본 특수과정의 취지에 따라 산업체 및 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본교의 교수는 최소한의 운영보조로 참여한다.

■ 현장밀착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산업체별로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이나 재교육, 전직자를 위한 적응교육 등 산업의 수요에 맞추어 산학연계 협동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 대학과 기업간의 인적교류확대

여기서 인적교류라 함은 산업의 연구개발 담당요원이 대학의 연구팀에 조인하여 해당연구과제가 완성될 때까지 파견되거나 이의 역과정으로 대학의 교수나 대학원생이 산업체의 연구소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수행하는 공동연구교류나 교수와 학생이 일정기간 산업체에서 현장경험을 진행하는 연수 또는 현장실습교류 그리고 학·석·박사 학위과정 또는 특별과정에 산업체직원을 등록시켜 수학하게 하거나 특정직무나 기술업무(예 : 리더십향상 등)를 개설하여 교육시키는 교육교류를 모두 포함한다. 부가적으로 대학과 산업체가 대형의 공동연구프로젝트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워크숍, 학술발표회, 전시회 등도 이 범주에서 산학협동의 일환으로 다룰 수 있다.

■ 대학평가요소

산학협동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질적 그리고 양적 성과를 대학종합평가나 산업체 지원을 위한 주요 평가요소로 개발하여 적용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산학협동의 결과에 따라 대학이나 산업체에 실질적 혜택이나 불이익이 발생토록 함으로서 산학협동의 의지를 강도도 높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하나의 동기부여 역할이 될 수 있다.

■ 업적평가

산학협동관련 교과개발, 과정개발, 교류개발, 기술개발, 제품개발, 공정개발 등의 실적을 대학에서는 연구논문 발표나 강의담당에 준하는 수준으로 업적에 산입하며 그리고 산업체에서는 고유직무수행 수준으로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책정자료로의 활용을 제도화할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지역혁신사업의 주역으로 대학의 역할을 연계시킴으로서 얻는 산학관 협동사업의 효과로서는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과 지역산업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를 위시하여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여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산학관 협동사업 형태로 실시 또는 추진 중이지만 앞으로도 지방 및 중앙정부에서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한다는 정

책실현의 의지가 변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이 실현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하건 인력양성을 중심으로 하건 산학협동을 잘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나라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도래와 같은 국가발전의 속도와 질을 가늠하는 관건이라는 인식이 굳건해지고 폭넓게 확산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산·학·관으로 이루어지는 구성주체들이 산학협동에 적극적

으로 참여한다는 공감대와 의지가 결집되어야 한다. 이 결집된 의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더욱 분발해가도록 지원하고 평가해주는 시스템의 구축이 뒤따라주어야 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천적 해결책 마련은 산학협동의 기치아래 국가발전으로 가는 길을 촉진하고 이의 성공가능성을 크게 높여 줄 것이라 기대한다. **박학**

대교협 2004년도 박사후 연수과정생(Post-Doc) 모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에게 고등교육에 관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4년도 박사후 연수과정생(Post-Doc)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학문분야 : 고등교육관련 전공분야
- 모집인원 : 5명
- 신청자격
 - 국내외에서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2004년도 8월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신청 가능
 - 박사후연수과정 기수혜자 신청 가능(총 2회까지 수혜가능)
 - 연구실적이 1편 이상인 자(등재(후보)학술지, 국제학술지 게재논문 등)
- 연수기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연수기간 : 1년
- 신청기한 : 2004년 5월 31일
- 문의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획개발부
 - 전화 : 02) 783-3065 - 팩스 : 02) 783-3645
 - 메일 : plan@kcue.or.kr

※ 이후 절차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후연수과정 추진계획에 따름